

# “국민연금 과도한 기업 의결권 행사하면 헌법소원 제기해야”

野, 의결권 행사 쟁점 토론회  
‘과도한 사기업 의결권 개입  
자유시장 경제 무너뜨리는 것  
지배구조 왜곡… 적기투자 불가능’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연금사회주의반대운동이 26일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의 과도한 기업 의결권 개입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유상범 의원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연금과 기관사모펀드의 기업지배, 어디까지인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헌법적 쟁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해당 토론회엔 유원내수석 외에도 송언석 원내대표, 박수영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 조배숙·나경원·곽규태·신동욱·김장겸·최수진·임종득·김은혜·박종권·이달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사진 촬영 후 자리에서 이석했다. 토론회에 끝까지 남은 의원은



(앞줄 왼쪽부터) 심상달 카이스트 교수,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 수석부대표, 최한열 한국금융 시장연구원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과 기관사모펀드의 기업지배, 어디까지인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헌법적 쟁점’ 토론회에서 참가자와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박태홍 기자

이달희·조배숙 의원 등이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이 강화되는 움직임을 지적하고, 주요 대기업의 2~3대 주주로 자리잡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상범 원내수석은 “시대가 바뀌어

서 노골적으로 대통령이란 사람이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라는 말을 했다. 어찌보면 관치금융시장을 선언했다고 할 정도로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그 와중에 국민연금이 시장에 관여할 때가 많다. 연말 환율 방어를 위해서 국민연금이 이용됐다는 것은 정부가 발

표하지 않았지만 공공연히 확인된 사실이다. 연금이 중요 기업들의 2~3대 주주가 되면서 조만간 시행될 집중투표제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경제계는)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 ‘연금은 투자할 뿐이지 의결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국민연금은 당치가 크기 때문에 투자한 회사들에 일일히 의사를 방해한다면 연금이 모든 기업을 지배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이 징악하고 있는 정부 또는 정권이 마음을 먹고 사기업의 의결권을 좌지우지 한다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자유시장 경제를 완전히 무너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최한열 한국금융시장연구원 대표는 사기업의 국·공유화 및 통제 등의 금지를 규정한 헌법 126조를 들며 국민연금과 집중투표제를 통한 의결권 행사는 헌법소원 제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 나선 신도철 전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의힘은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의 위헌·위법성을 문제 삼을 필요가 있다”며 “경제단체는

의결권 행사 조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나선 정관열 전 삼성전자 부사장은 “지배구조의 왜곡이 생기게 되면 시간이 중요한 첨단산업은 적기투자가 불가능해 진다”며 “나쁜 시나리오지만 외국계 악성 자본이 들어와서 이사회에 일부 영향을 주며 투자 시기만 1년 정도 늦춰놔도 삼성전자가 시장경제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단순한 지배구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쟁력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전 부사장은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 평가 방식을 기준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해,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매각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삼성생명법’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정 전 부사장은 “독일은 보험사 알리안츠를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쓰고 있다”며 “우등생들은 둘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바꾸는데 왜 우리는 (삼성생명법으로) 발목을 잡나. 법안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민주당, 故 이해찬 애도·추모 기간 지정

정쟁적 요소의 논평·발언 자제 요청  
수석사무부총장에 최기상 의원 임명

더불어민주당이 정무직 당직자로 수석사무부총장에 최기상 의원, 전략기획위원장에 이연희 의원, 인재위원장에 김영진 의원, 인재위원장 간사에 박홍배 의원을 임명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해식 전 전략기획위원장과 교체 사유를 묻는 질문에 “본인 개인의 사정으로 2~3주 전에 당 대표에게 사임을 표명했고, 신임 전략기획위원장이 임명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식 전 위원장의 사의 표명이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과 합당 제안과 관계 있느냐는 질문에 “매우 개인적 사정”이라며 “지방선거 관련인데, 본인이 출마하거나의 사정은 아니고 서울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추모하기 위해 이번주를 애도 및 추모

기간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민주당은 국회의원 등에게 애도 및 추모 기간 중 연행에 각별히 유의할 것과 정쟁적 요소의 논평과 발언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시도당별 추모 빈소를 설치하고 추모 현수막을 게첩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추모 기간 중 최소한의 당무만을 처리할 것을 지시했고, 29일 본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하되, 여야 정쟁 요소가 있는 법안은 제외하고 합의된 민생법안만을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정 대표는 고인의 유해가 오는 27일 오전 6시40분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도착하는 것에 맞춰 공항에 고인을 맞으러 갈 예정이다. 장례 기간 중 정 대표는 상주 역할을 하며 빈소를 지킬 예정이다.

최소한의 당무에 무엇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박수현 대변인은 “가급적 (조국혁신당과) 합당에 관한 당내 의견수렴 절차 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포함한다”며 “대부분의 절차들이 연기될 것이다. 다만, 기간 내 반드시 결재가 필요한 사안이라든가 실무적 당무가 진행된다면 취지”라고 설명했다.

## 한미 통상마찰로 번지는 쿠팡사태

## 한국 정부 “차별 없다”… ‘강경 기조’ 유지

美측, 차별 대우 주장하며 조사 요청  
“주가 하락해 막대한 손실 발생” 주장

쿠팡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전방위적 압박이 길어지면서, 해당 문제는 한미 간 통상 마찰로 번지고 있다. 미국 기업인 쿠팡 측이 ‘한국에서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와중이지만, 우리 정부는 엄정 대응 기조를 거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산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쿠팡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우를 주장하며 미국 무역 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하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차별 대우’라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조사해달라고 나선 이유는 쿠팡의 주가 하락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쿠팡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쿠팡의 주가는 정보유출 사태 이후 약 30% 가까이 하락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쿠팡 사태 이후 국회 청문회 및 정부 조사 등이 잇따르면서 주가가 꺾였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보 유출 이슈에만 집중했으면 국제통상 문제로 번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쿠팡에 대해 12개 정부 부처가 나서 정보유출 사태 외에도 노동·세무·물류·공정거래 등 전방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외국 기업 차별’이라고 주장할 만한 빌미를 줬다는 지적인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쿠팡을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다보스포럼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쿠팡에 대한 국내 수사를 일 반적인 통상 이슈와 구분해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JD 밴스 미국 대통령과 만나 ‘쿠팡 사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쿠팡에 대한 ‘차별 대우’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22일엔 미 연방 하원의원들과 만났을 때도 “쿠팡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하원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김총리는 “한국은 ‘조지아 사건’이 한국 노동자들이 미국으로부터 ‘인종·국적 차별’을 받은 건 아니라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면, 한국 역시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서 수사하는 게 아니라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국적과는 상관 없이,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설명한 셈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이날 사망사고가 있따라 발생한 쿠팡에 대해 ‘쿠팡이라고 해서 달리 볼 이유는 없다’며 원칙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 권봉권·쿠팡 상설특검 역시 이날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했다. 상설특검은 쿠팡이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과 해당 사건을 조사한 담당 검사들에게 겹칠 수 있도록 무혐의를 암박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쿠팡 측의 주장이 억지라고 보고 있다. 노동·세무 등 문제를 조사하는 것은 ‘정보유출 사태’로 인해 촉발된 게 아니라, 기존에 제기된 문제였다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에서 김남근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쿠팡 바로잡기 TF’ 출범식을 연다. TF에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을 다룰 별도 조직이다. 정부에 이어 여당도 쿠팡의 문제를 살살이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은 셈이다. /서예진 기자 syj@

/뉴시스



/뉴시스